

과학기술계 핵심현안에 대한 노무현 후보의 정책방향

새로운 시대!
과학기술 중심사회!
Science Korea를 열며

2002. 12. 13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통령후보
노무현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들께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차 국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후보로서, 과학정책의 방향에 관한 저의 소신과 약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덕의 연구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국제 경쟁 속에서도 ‘당당한 나라’, ‘아시아의 중추 국가’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정책일 것입니다.

아마도 ‘원칙과 소신에 의한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저의 비전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은 한 마디로 과학
기술중심사회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가 될 21세기의 국
운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와의 무한경쟁에서 승리
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사이언스 코리아, 과학기술중심사회는 우리
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며 저 노무현의 약속
입니다.

첫째로,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
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

고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제성장과 진보에 이르는 직접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이 국가발전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정책기조 즉, 과학기술 중심사회,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지원, 과학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위한 주요 과제]

첫째 과제로, 신산업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 기술 분야 집중 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 BT, NT, ET, ST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과학, 공공기반기술, 원천핵심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첨단기술과 전통기술의 융합으로 기술증대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연구개발센터를 확보하여 글로벌 연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R&D예산을 현행 4.7%에서 7%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상향시켜야
합니다.

둘째 과제로,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이공계 기피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미래의 유망한 과학기술자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공계 기
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합니다.

이공계 지도자를 국가지도자로 육성하겠습
니다.

정부 주요 위원회에 과학기술인 참여를 확대
하고, 과학기술관련 정무직을 확대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정부의 3급 이상 기술직 임용가능

직위 중 기술직 임용비율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더욱 많은 과학기술자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 공무원 신규임용시 '이공계 출신자 우대정책' 및 '최소임용비율 할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술고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력 적정임금 유지 정책을 도입하여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고용, 연금제도, 사회보험 등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IMF 이후 출연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맨 먼저 연구직을 감원하여 비용을 축소하였고, 출연(연)에서는 정원 축소 및

정년 감축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현장의 여러분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현장의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연구소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학기술자 특히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은 과학기술 전쟁에 있어 그야말로 정예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밥을 안 줍니까? 요즈음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치열한 전쟁은 기술전쟁이

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군대가 밥을 굶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PBS(project base system)제도는 연구원의 자존심을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연구현장의 사기저하에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연구소의 인건비체제부터 개선하고자 합니다. 출연연구소의 안정적인 인건비를 보장하고, 현재의 PBS 제도는 경쟁적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원 정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61세로 축소되어 있는 연구원의 정년을 사립대학 교원의 수준인 종전의 65세로 환원시키라고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시고, 다른 후보는 63세 연장을 약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연구원을 다만 육체적인 나이를 이유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자원의 낭비이며, 기회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참여하는 연구과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및 감사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현행 연구비 집행내역 위주의 감사체제는 연구를 마치 집 짓는 공사의 개념으로 보는 공사감독관의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연구

에 지장을 주는 빈번한 각종 감사는 대폭축소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평가 시행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장기성을 고려하여 시행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전문평가기관을 신설하여 평가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연구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구개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과제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와 인력 활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신의 기술진보를 파악하여,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수요지향형 이공계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이공계대학 교육 및 연구 지원법]을 제정하고, 최신의 기술 지식을 습득

과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 지원체계’ 선진국
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자가 사회 진출, 승진·급여·
프로젝트 수행 등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총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여성과학기술자 관련예산으로
확보하여 여성과학기술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학자육성 및 지원을 국가의 책
무로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자가 남성과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고급인력 활용 확대 방안으로 박사
급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30%)를 도입
하겠습니다.

넷째 과제로, 지방 과학기술 진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가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 국가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과학기술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방 분권화시대, 산학연 클러스트를 통한 지방 과학기술의 진흥은 지역 균형발전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대덕연구단지과 진주/사천, 대구, 광주, 오송, 송도, 춘천 등 산업별 첨단 과학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연구개발 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외국 선진기술지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들 클러스트 지역에 외국기업진출 및 해외자금이 유입되도록 관련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해외 한인과학자와의 지식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으며, 우수한 해외유학인력 유치시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칭)국가연구개발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공동실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방전략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별 ‘과학기술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예산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된 해외수출시장에 구체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공동연구기반 시설을 갖추어 현지시장의 기술 및 수요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현장에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과학기술협력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체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남북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남북의 과학기술 수준 및 과학기술체계 이해를 위한 인적 교류, 남북한 과학기술 수준 공동 조사, 한반도 청소년 과학기술 캠프 개최, 대북한 과학기술정보 제공 사업,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생산기술 협력사업 실시, 남북한 과학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등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과학기술인의 역할과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2003년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실질적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꿈과 기회와 도전을 주는 핵심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인이 존경받고, 안심하고 자율성을 갖고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중심의 시대가 되면, 과학기술인 여러분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은 탈냉전의 민족 번영의
시대, 세계 중심국가 위대한 한반도 시대의
주인입니다.

이 길에 노무현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